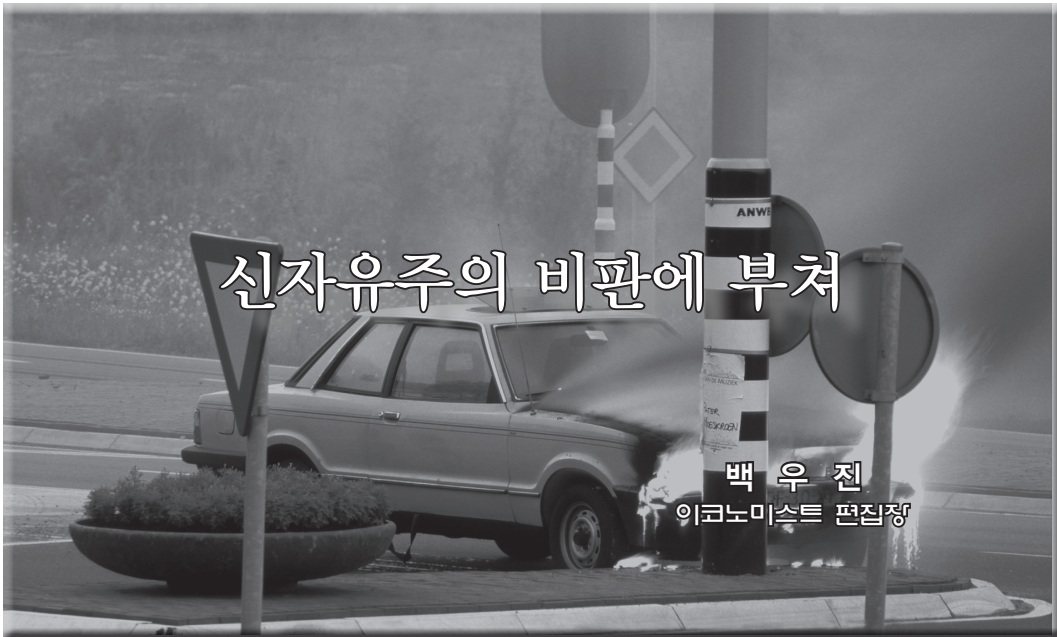




전문: 자동차 사고가 났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두 부분을 고쳐야 한다. 자동차를 버릴 필요는 없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득세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형 사고가 났으니 자동차를 버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비판자들은 자유무역이 한국에 이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설득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새로 대두된 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민영화, 금융·외환시장 자유화 등을 뼈대로 하는 정책운용 기조를 가리킨다. 신자유주의 비판자들은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지목한다. 미국에서 비롯된 부동산 버블과 이와 관련한 파생금융 상품에서 난 탈이 세계경제 전체에 타격을 준 것은 세계화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쏟아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책 제목에서 가늠할 수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닫고 다른 사회를 상상하다’와 ‘신자유주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 ‘신자유주의 대안론’ ‘수전 조지의 Another World: 폭압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실천적 대안서’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 경제’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 동력학’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지리적 불균등 발전론’ 등 이름을 붙인 책이 나왔다.

신자유주의 비판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인간성, 민주주의, 페미니즘, 기아 등 주제와 관련해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이 서가를 채웠다. ‘신자유주의의 테러리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역사의 대반전,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벌거벗은 생명: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명 정치와 페미니즘’ ‘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식량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II. 세계경제는 자유주의로 비약적 발전

신자유주의 경제에 앞서 먼저 자유주의 경제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국가가 경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국제교역이 활발히 이뤄지며 촉진되는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 시장경제는 제1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전성기를 구가했다. 자유 시장경제는 국경을 넘어 전세계를 무대로 거침없는 팽창과 통합의 과정을 질주한다. 1800~1913년 세계 생산은 2.2배 증가한 반면 1인당 무역은 25배 늘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대외투자는 국민총저축의 절반에 이르렀다.

제1차세계대전은 무역망을 파괴하고 수입대체와 경제적 민족주의를 자극해 국제무역에 타격을 줬다. 이후 서서히 진행되던 세계화 과정은 대공황으로 인해 다시 뒷걸음치게 된다. 국제무역은 대공황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미국이 1930년에 스무트-홀리법을 시행하면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더욱 위축됐다.

자유 시장경제권 주요 국가의 경제정책 기조는 대공황을 겪으며 일대전환을 거친다. 시장이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자유주의에 수정이 가해진다. 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장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바로잡고 시장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주장이 입지를 확보했다.

케인스가 1936년에 펴낸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은 시장이 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기존 경제학의 인식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고전학파라고 불리게 된 당시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프랑스 경제학자 세(Say)의 말을 굳게 믿었다. 세의 말은 ‘세이의 법칙’이라고 불렸다.

고전학파는 재고 축적이나 실업과 같은 불균형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파악했다. 재고는 제품 가격이 떨어져서, 실업은 임금이 낮아져서 해결된다고 봤다. 생산한 제품이 덜 팔려 실업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사태는 일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소지가 없었다. 그러나 대공황은 이런 믿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케인스는 기존 경제학의 관념을 버리고 현실과 처방을 택했다.

III. 자유주의, 케인스에 의해 보완되다

일반인에게는 케인스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기존 자유주의 경제학과 얼마나 거리를 둔 것인 것 같이 잘 오지 않는다. 케인스는 『일반이론』의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까지 경제학은 세의 법칙에 의해 지배됐다. ‘수요가 공급에 의해 창출된다’는 세의 법칙은 암묵적으로 경제는 늘 완전가동 상태로 작동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이 전제에 기초를 둔 이론은 실업과 경기변동이라는 문제를 풀기에 역부족이다. 내 책은 세의 법칙과의 최종적인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다.” 케인스는 공급 과잉, 또는 수요 부족을 시장이 해소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황과 실업을 퇴치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든 유명한 비유가 ‘피라미드 건설’과 ‘지폐 파묻기’를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이었다.

케인스는 “고대 이집트는 두 가지 활동, 즉 피라미드를 짓는 것과 귀금속을 찾아내는 일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운이 좋았고, 의심할 바 없이 그 덕분에 전설적인 부를 쌓을 수 있었다”며

“피라미드를 두 개 짓는 것이 한 개 짓는 것보다 두 배로 좋다”고 비유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무부가 낡은 병들에 은행권을 가득 채우고 그 병들을 폐탄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은 뒤 그 위를 지표면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쓰레기로 덮은 다음 자유방임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금 그 은행권을 다시 파내도록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 파급 영향 덕분에 공동체의 실질 소득은 물론이고 자본적 부(富)도 기존 수준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대공황 이후, 즉 제2차세계대전 이후 케인스 경제학은 자유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됐다. 정부는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도 맡게 됐다

IV. 시카고를 본산으로 한 신자유주의 대두

이단이었던 케인스 경제학은 세계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리면서 패러다임의 지위를 차지하는 듯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고 케인스 처방이 잘 듣지 않게 되면서 자유주의 경제학이 다시 득세했다. 시카고 대학을 본산으로 한 경제적 자유주의가 바로 신자유주의로 불리게 됐다.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는 1980년대에 경제정책 기조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했다.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신자유주의는 더욱 기세를 올린다.

신자유주의는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해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에 치중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며 통화정책은 준칙에 따르는 것을 권장했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확대가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명제 아래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조합은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쓴 ‘워싱턴이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유래했다. 여기서 워싱턴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를 가리킨다. 윌리엄슨은 1980년대에 IMF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워싱턴이 보는 바람

직한 정책 조합을 추출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로는 절제된 재정, 세제개혁, 금리 자유화, 경쟁적인 환율, 무역 자유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민영화, 진입 및 퇴출과 관련한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등이 꼽혔다.

케인스는 고전학과라고 불린 자유주의를 뒤엎었다. 계기는 대공황이었다. 이번 경제위기를 기화로 목청을 높이는 신자유주의 비판이 신자유주의를 부술 것인가? 공산은 그리 크지 않다.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화를 촉진한 것, 그리고 버블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지목하는 데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일은 결과 하나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을 꼬집어내는 건강부회와 다르지 않다.

V.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은 적절한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위험한 길에서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던 사람이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고의 원인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취미를 탓할 수는 없다. 다른 비유도 가능하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불량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위험한 자동차였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버리고 앞으로 타거나 물지 말아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고치는 것이 아닐까?

신자유주의의 각론에 대한 비판 중에서 금융 및 자산시장을 자유방임으로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에는 설득력이 있다. 다른 각론에 대한 비판은 그러나 타당성이 크지 않다.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선진국은 나쁜 사마리아인이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저희가 부자가 된 방법을 따라 하지 말라고 금지한다. 선진국이 부자가 된 방법이란 자국 시장을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으로 보호하고 유치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전략적 무역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국은 개도국과의 무역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쌓았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전략적 무역정책을 막았다. 경쟁자가 더 올라오지 못

하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다. 그 결과 자유무역 체제에서 개도국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자유무역 체제가 선진국에 유리한 방식인 것이다.”

VI. 선진국은 보호무역을 좋아해

먼저 선진국이 개도국에 “터놓고 지내자”며 자유무역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살펴보자.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신자유주의의 패권이 더 강해진 1990년대, 선진국 미국은 개도국을 압박질러 자유무역을 관철시켰나? 1993년과 1998년 사실이 당시 기류를 잘 드러낸다. 각각 일부를 전한다.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유럽공동체(EC) 제품에 대한 정부입찰 제외 예비결정 등 일련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와 철강 제품에 덤핑 판정을 내리는 등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는 한마디로 값싼 아시아 수출상품에 대한 장벽 쌓기다. 이 같은 신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미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을 자극해 다른 선진국들도 다투어 수입장벽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선진국이 자유무역을 강요할 뿐 아니라 개도국이 전략적 무역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주장 또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 중국은 1990년대까지 평균 30%가 넘는 수입관세율로 외국 제품을 막아 자국 산업을 보호했다. 중국은 철강, 정보통신, 목재, 강관, 타이어, 조선, 태양전지 등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보조금과 금융·세제혜택을 줬고 주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맞서 잇달아 상계관세를 매기고 있다. 개도국은 계속 사다리를 받혀놓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 선진국이 보복조치를 취하며 사다리 효과를 무력화하지만, 개도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다리를 걸치고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자유무역체제에서 개도국의 형편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 개도국의 눈부신 성공 사례로 충분히 반박된다. 신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개도국의 형편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한참 전에 퇴장한 종속이론의 아류를 넘어서지 못한다.

과거 선진국이 자유무역을 포기한 건 아니다. 미국은 필요할 때면 자국이 강한 산업에서 자유무역을 하자면서 수시로 시장개방 압력을 넣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관철하기 위해 ‘슈퍼 301조로 보복한다’고 으박지르곤 했다. 슈퍼 301조는 미국 정부가 무역분쟁 상대국의 통상마찰 품목뿐 아니라 모든 수출품에 대해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선진국이 개도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시종일관 자유무역이 좋다고 강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다.

VII. 한국 경제는 FTA를 주도해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변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비판은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과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로 직결된다. 비판자들은 한국이 자국보다 선진국과 벽을 트고 자유롭게 무역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미국과 FTA로 득을 보지 못한 멕시코가 종종 거론된다. 그러나 경제는 하기 나름이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 경쟁할 만한 산업이 멕시코보다 훨씬 많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FTA의 득실을 미리 정해놓고 걱정하는 건 기우일 공산이 크다.

한국은 세계의 자유무역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잿더미에 파묻혀 있던 경제를 일으켜 우뚝 세웠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산업육성 및 경제발전 전략을 많은 개도국에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 여부 역시 자유무역 체제를 비판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주도하며 열어나가는 데 달린 문제가 아닐까. ☺